

“청년이 좋아하는 청년정책은 무엇인가요”

도, 선호도 조사 진행... 상위 3개 사업 확대 추진 방안 마련 ‘전북청년허브센터’ 개소 1주년 축하 이벤트도 함께 진행

전북도가 ‘전북청년허브센터(이하 센터)’ 개소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청년정책 선호도 조사’와 함께 정보제공 서비스 확대를 위한 ‘축하 이벤트’를 추진한다.

도는 센터와 함께 ‘청년이 좋아하는 청년정책 선호도 조사’를 5월 17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다. 지난 14일 밝혔다.

이번 ‘청년정책 선호도 조사’는 순도비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12개 정책 중 전북 청년의 삶 속에 가장 필요한 사업이 무엇이고, 청년이 가

장 공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마련했다.

도는 이번 선호도 조사로 선정된 상위 3개 사업에 대해 청년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후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전북도는 청년정책 선호도 조사와 함께, 지난해 5월 도내 청년들의 성장과 교류의 거점 공간으로 탄생한 센터 1주년 축하 이벤트도 진행한다.

센터는 분산된 청년지원사업 정보

를 취업, 창업, 복지, 주거 등 6개 분야로 구분해 한 곳에 모았다.

그리고, 해당 정보를 홈페이지, 카카오톡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센터 운영 현황을 확인한 결과, 총 72만5,000여 명이 방문했다. 월 평균 5만5,760명, 일 평균 2,000여 명이 방문하는 등 명실공히 청년정책 중심지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1주년 이벤트’는 6월 13일까지 한 달간 진행한다.

전북청년허브센터 누리집(www.j2030.or.kr)에서 접속 알림을 신청하면 참여가 가능하다.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커피 등 모바일 쿠폰을 지급한다.

또한, 알림 신청자에게는 매달 중앙부처와 전북도, 시·군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청년지원사업 정보와 청년행사 소식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종훈 도 일자리경제정책관은 “이번 청년정책 선호도 조사 결과를 통해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조사를 참고해 향후 청년정책을 추진하는데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 민주화운동 계승사업 필요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통해 장소 기억화·종합 사업 과제 제안

전북연구원(원장 권혁남)이 이슈브리핑을 통해 전국을 선도했던 전북도의 민주화·인권 운동을 계승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사업이 필요하며, 정책적 과제를 제안했다.

전북도는 군부독재에 맞선 민주화·인권 운동에 있어 어느 지역보다 선도적이었다.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1960)를 규탄하는 전국 대학 최초의 4·4시위(전북대, 1960), 유신 계엄에서 최초로 유일한 비상계엄 반대시위(전주교, 1972), 유신 치하 최초의 성직자(은명기 목사) 구속피해(1972), 1980년 5월 계엄 선포 이후 최초 희생자(이재종 열사) 피해가 전북도에서 있었다.

이 주요 사건과 장소, 인물과 시대정신을 정리하는 2단계 기록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소의 기억화는 장 박사가 특히 강조하는 사업이다.

김주열 열사 시신 인양지(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는 경상남도 기념물(제277호)로 지정됐으나, 전북도에서는 민주화·인권 운동과 관련한 장소 등이 기념물로 지정돼 있지 않다.

기록화 사업을 통해 장소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정리하고, 민주화·인권 운동을 대표하는 장소를 기념물로 지정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는 게 장 박사의 설명이다.

장 박사는 “기념공간이 필요하다”면서 “건립 중인 전북대표 도서관을 활용하거나, 새롭게 전라북도역사박물관을 추진해 민주화·인권 운동과 관련한 자료를 모아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교육·체험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장 박사는 민주화·인권 운동과 관련한 기념공원·광장을 지정, 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상징적 장소로 만들어야 한다는 과제도 내놓았다.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1960)를 규탄하는 전국 대학 최초의 4·4시위(전북대, 1960), 유신 계엄에서 최초로 유일한 비상계엄 반대시위(전주교, 1972), 유신 치하 최초의 성직자(은명기 목사) 구속피해(1972), 1980년 5월 계엄 선포 이후 최초 희생자(이재종 열사) 피해가 전북도에서 있었다.

장세길 박사(사회문화연구원 연구위원)는 “동학농민혁명에서 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지는 전북의 시대정신을 정리해야 한다”면서 “전북도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고, 장소와 인물을 기억하는 종합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박사는 “기념공간이 필요하다”면서 “건립 중인 전북대표 도서관을 활용하거나, 새롭게 전라북도역사박물관을 추진해 민주화·인권 운동과 관련한 자료를 모아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교육·체험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장 박사는 민주화·인권 운동과 관련한 기념공원·광장을 지정, 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상징적 장소로 만들어야 한다는 과제도 내놓았다.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1960)를 규탄하는 전국 대학 최초의 4·4시위(전북대, 1960), 유신 계엄에서 최초로 유일한 비상계엄 반대시위(전주교, 1972), 유신 치하 최초의 성직자(은명기 목사) 구속피해(1972), 1980년 5월 계엄 선포 이후 최초 희생자(이재종 열사) 피해가 전북도에서 있었다.

장세길 박사(사회문화연구원 연구위원)는 “동학농민혁명에서 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지는 전북의 시대정신을 정리해야 한다”면서 “전북도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고, 장소와 인물을 기억하는 종합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과제를 살펴보면,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일을 첫 번째 과제로 제안했다.

이는 민주화·운동 계승사업을 담당할 위원회를 구성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또, 장 박사는 “지난 2008~2012년까지 단편적으로 이뤄진 전북도의 민주화·인권 운동 기록화 사업을 이어받

장 박사는 “기념공간이 필요하다”면서 “건립 중인 전북대표 도서관을 활용하거나, 새롭게 전라북도역사박물관을 추진해 민주화·인권 운동과 관련한 자료를 모아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교육·체험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장 박사는 민주화·인권 운동과 관련한 기념공원·광장을 지정, 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상징적 장소로 만들어야 한다는 과제도 내놓았다.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1960)를 규탄하는 전국 대학 최초의 4·4시위(전북대, 1960), 유신 계엄에서 최초로 유일한 비상계엄 반대시위(전주교, 1972), 유신 치하 최초의 성직자(은명기 목사) 구속피해(1972), 1980년 5월 계엄 선포 이후 최초 희생자(이재종 열사) 피해가 전북도에서 있었다.

장세길 박사(사회문화연구원 연구위원)는 “동학농민혁명에서 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지는 전북의 시대정신을 정리해야 한다”면서 “전북도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고, 장소와 인물을 기억하는 종합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도, 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

2023년까지 1200명 배출 목표

국내 최대 규모인 3.0GW급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전북도가 태양광 유지보수 전문인력 양성에 속도를 낸다.

신재생에너지산업 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배출이 필요하다.

또, 변화하는 응용연구를 위한 고급 인력의 수요가 증가하고, 기업이 요구하는 현장 실무형 기술인력 연계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도는 2023년까지 총 65억원을 투입, 태양광 발전시설 유지보수가 중심인 교육과정을 5월부터 본격 운영해 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총 1,200명을 양성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도는 올해 재직자 과정 15기, 취업자 과정 6기, 전문가 과정 1기 등 총 22기에 걸쳐 300명의 인력을 배출할 계획이다.

또한,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11

월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전문인력양성 센터 구축에 들어간다.

재생에너지 전문인력양성 교육은 전액 무료이며, 기업 및 교육참여자의 수요에 맞춰 재직자·취업자·전문가 3개 과정으로 운영한다.

인력양성 교육은 재직자 과정 5일, 취업자 과정 20일, 전문가 과정 40일로 진행한다.

태양광 발전설비, 시설·안전·행정 관리 및 발전량 모니터링 등에 관한 이론 및 실습도 병행한다.

교육은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전문인력양성 센터가 구축되기 전까지 부안 신재생에너지 소재개발지원센터에서 진행한다.

전병수 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집합교육을 진행하는 만큼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계획이다”며 “새만금 재생에너지클러스터 조기 정착을 위해 재생에너지 산업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양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한담장으로 향하는 문 대통령과 신임 국무위원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한담장으로 함께 이동하고 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도민 의견 수렴

전북도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에 따른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는다.

도는 축산물 위해요소중점평가관리기준(해썹/HACCP) 제도 및 안전관리 강화를 골자로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6월 9일까지 수렴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기축전염병 발생으로 진입이 제한(이동제한지역)되는 가축사육농장에 대해서 비대면 해썹(HACCP) 평가를 허용한다.

조사·평가 결과 95점 이상을 획득한 우수업체의 차기 조사·평가 면제 기간을 명확히 한다.

해썹(HACCP) 인증 신청 처리기간도

신규 신청의 경우 현행 60일에서 40일, 인증 연장 신청의 경우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각각 단축한다.

또한,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HACCP 신규교육 미수료 시, 시정명령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HACCP 교육수료증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한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처분도 기존 업무정지 3개월에서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강화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축산물 가공업체의 경제활동 부담을 덜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비대면 조사 전환

전북도가 코로나19 등 사회변화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을 위한 종합조사 방법을 가정방문을 통한 대면조사에서, 전화를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로써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도 장애인에게 신속한 보조기기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도는 지난 2015년부터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식사 보조기구, 보행차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종합조사를 실시한 후 전북도보조기기센터에서 적합성 상담 등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이제 전화를 활용한 비대면 종합조사를 진행한다. 이에, 대면조사로 인한 장애인 및 보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조사기간도 단축해 보조

기기의 신속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본인 또는 보호자가 방문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방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장애인 편의를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도는 먼저 시각·청각·지체성·언어장애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종합조사를 실시하고, 추후 대상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황철호 도 복지여성보건의료국장은 “코로나19로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해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보조기기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생활필착형 보조기기 개발을 위해 다각적인 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조기기 교부 한도는 1인 1제품이 원칙이다. 동일한 품목을 지원받았거나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또는 사회복지단체 등에서 보조기기를 지원받은 장애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 체력시험 시행

전북도는 17일부터 25일까지 석가탄신일(19일)을 제외한 6일 동안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 체력시험을 갖는다.

이번 체력시험은 12개 분야 필기합격자 581명을 대상으로 도청 지하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특히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오전, 오후 각각 50여 명 정도로 나눠

진행한다.

체력시험은 총 6개 종목이며, 결과는 최종합격자 점수에 15%를 반영한다.

또한,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력시험의 응시자 5%를 대상으로 금지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도 진행한다.

/유호상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